



### 대기업 구조조정본부 폐지... 기업 자율로 결정할 일

인수위원회는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룹 구조조정본부가 사실상 재벌 총수의 비서실 기능을 하면서 부의 부당한 세습작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구조조정본부 조직의 존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인수위의 방침은 대기업 구조조정본부의 전면 개편이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재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1월 3일자 동아일보>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기업 구조조정본부를 폐지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김대환 경제Ⅱ분과위 간사가 정정보도를 통해 밝혔듯이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

정부부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존폐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인수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대기업 구조조정본부 폐지에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인의 대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의견은 지금까지 현정부에서 추진해온 '5+3'의 원칙과 상시구조조정 원칙 하에서 충격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며, 기업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고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발휘되는 토대 위에서 경제운영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 부방위 산하에 권력비리조사처 신설... 부방위 희망사항일 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의 부패 문제를 전담 조사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지가 2일 단독 입수한 인수위 내부 자료에 따르면 부방위원장 직속으로 비리조사처를 설치하고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집과 감시 등을 전담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이 기구에는 권력형 부패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등 조사 기능과 함께 사실 확인이 끝나면 특별검사의 임명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1월 3일자 중앙일보〉

중앙일보에 1면 톱으로 보도된 '권력형 비리조사처 신설 추진' 제하의 기사 중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의 부패문제를 전담 조사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내용은 부패방지위원회의 희망사항이다. 인수위에서 전혀 고려되거나 검토되지 않은 사항임을 밝힌다.

## 인수위, 농산물 수입쿼터제 추진... 확정된 것 없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24일 국제무역기구(WTO) 농업개방 세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정부측에 전면 관세화 대신 품목별 수입량 쿼터제를 협상안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4일 "세계적인 흐름은 관세화를 통한 전면 개방이지만 이 경우 우리 농가에 미칠 충격이 워낙 커서 쌀과 마찬가지로 다른 농산품목도 수입량을 정해 매년 늘려가는 방안을 정부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세화와 쿼터제 모두 장단점이 있고 장기적으로 다 개방

할 수밖에 없지만 당장 혼란을 막기 위해 일단 관세화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1월 4일자 문화일보〉

문화일보 1면의 '농산물 수입쿼터제 추진' 제하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오는 2월 24일 DDA협상(도하개발아젠다)을 앞두고 농산물 수입개방 중 우리측에 가장 유리한 UR방식을 주장해야 하며, DDA협상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농산물 무역의 관세화 방식의 방법에 따라 우리 농업에 미치는 충격이 워낙 커서 '현재의 관세폭을 인정하고 점차 낮추어 가는 방식(UR방식)'과 2004년 쌀 재협상에서는 계속적인 관세화 유예 방안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방법의 협상안이 받아들여질지 의문이지만 관세화를 하든 양허(유예)를 얻든, 일단 모든 농산물의 급격한 관세화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며, 오는 2월 24일 DDA협상 의장초안이 제출되면 3월 말까지 이를 토대로 협상이 결론지어져야 한다.

##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 국민연금발전위에서 결정할 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7일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급여인하 및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곧 급여율 및 보험료율 조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법상 보험료율은 오는 2009년까지 월급여의 9%로 유지하기로 규정돼 있어 보험료율 인상문제는 기본방침만 정하고 이번 인수위에서는 급여율 인하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월 7일자 내외경제신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아직 논의 및 결정한 바가 없다.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논의는

현재 국민연금발전위원회(위원장:송병락 서울대 교수)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보험료율 및 급여수준 조정 등은 위원회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해 모두가 법 개정을 통해 결정될 사항이다. 이와 같이 중대한 사안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민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이니 보도에 참고하기 바란다.

### 이공계 유학비 지원 백지화... 요청 사실 없어

인수위와 정부부처가 일부 사안에서 정책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가 올해 예산이 편성돼 이미 착수단계에 들어간 국책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공계 인력 1000명에 대한 유학경비 지원방침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인수위는 포스트닥터(박사이수 후 연수) 공동연구 장기연수에 대한 지원은 당초 계획의 틀을 대체로 유지하되 학부과정을 마치고 해외대학 석 박사 과정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경비보조는 백지화하라고 요청했다. <1월 11일자 대한매일>

인수위는 재정부의 '2003년도 경제운영방안' 업무보고(1월8일)를 받을 때 이공계 유학비 지원 백지화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공계 사기 진작 및 인력 양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지원해주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해외유출을 예방하고,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용방안은 다소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이 있었고, 이에 대해 해당 부서인 과기부는 예산운용 개선 방안에 대해 전혀 이견이 없었다.

### 새정부 줄대기 '법석'... 업무보고 방문, 인사 청탁으로 오도

노무현 대통령당선인이 지난달 말 "인사청탁을 할 경우 패가 망신할 것이다"는 강력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부의 장관 인선을 앞두고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노 당선인측에 대한 '줄대기 경쟁'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 때문에 노 당선인의 집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의 임채정 인수위원장과 신계륜 비서실장 사무실에는 눈도장을 찍으려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매일 10명 이상 몰려들어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1월 15일자 동아일보>

제목을 뒷받침하는 기사 중 '임채정 인수위원장과 신계륜 비서실장 사무실에는 눈도장을 찍으려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매일 10명 이상 몰려들어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업무보고를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지 새정부에 줄을 대기 위해 인사청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동아일보 3면의 기사 중 '임채정 인수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모교인 고려대 출신 인사들이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온다. 빨리 인수위가 끝나야지 살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임채정 위원장은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동아일보의 이 두 가지 기사에 대해 회사측에 공개적으로 정정보도 요청을 한다.

### 전경련 '왕따'... 의도적 평가르기

새정부가 재계와의 대화 창구로 '대기업 단체'인 전경련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김석중 상무의 뉴욕타임스 인터뷰 파문으로 더 강해질 전망이다. 전경련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전경련을 '활용 대상'이 아니라 '개혁 대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게 재계의 인식이다. 가령 지난달 노무현 당선인과 경제 5단체장 간의 모임을 주선하는 데 전경련이 빠졌고, 14일에 열린 재계 인사들과 인수위의 간담회 역시 전경련에 주선을 요청하지 않은 채 인수위가 참가자를 골라 직접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14일자 조선일보>

경제 5단체장 간담회는 전경련의 주선으로 이뤄졌고, 재계간담회는 인수위측 요청에 따라 전경련이 대상자 선정과 섭외를 담당했다. 시내판 기사에 이 부분을 삭제하기는 했지만, "전경련 '왕따'?"라는 제목을 뒷받침하는 기사 내용이 삭제되었음에도 제목은 바뀌지 않았다. 조선일보에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한다.

## 10년내 화폐 '경' 단위 불가피... 새정부 장기 검토과제

한국은행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선진경제 진입 및 통일시대에 대비, 화폐단위 변경(디노미네이션)을 건의하며 구체적인 시안을 보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돼 차기 정부에서의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15일 "지난 8일 한은 업무보고에서 한은측이 화폐단위 변경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시안을 보고, 인수위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1월 15일자 연합뉴스>

한국은행에서 화폐단위 변경내용을 건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건은 인수위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전혀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도 없고, 화폐단위 변경문제는 장기과제로써 새정부가 출범한 후에 필요하면 검토할 사안이다. 인수위차원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 생보사 연내 상장... 인수위 결정권 없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올 상반기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작업을 거쳐 연내에 상장된다.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생보사를 상장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주주와 보험계약자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장이익을 나누는 방식은 주식배당이 아니라 현금배당을 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1월 16일자 문화일보>

'삼성 등 생보사 연내 상장' 기사와 관련, 이 건은 인수위가 다룰 대상이 아니다. 다만 어제 금융감독원 보고를 받을 때, 이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한 보고는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인수위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인수위원회의 명확한 입장이다.

## 아파트 후분양 추진... 구체적 논의 없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Ⅱ분과는 16일 노무현 대통령당선인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지방부터 순차적으로 시범 실시한 뒤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 각종 보완책도 마련중이다. 인수위의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대책은 오는 22일 사회문화여성분야의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방안의 하나로 당선인에게 공식보고될 예정이다. <1월 17일자 문화일보>

문화일보 1면에 '아파트 후분양 추진' 제하에 '인수위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를 검토 중으로 지방부터 순차적으로 시범 실시한 후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는 기사가 났다.

인수위의 의견은 주택 후분양제는 주택금융 등 시행여건의 성숙여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택구매자와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아직까지는 시행여부,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

### 유관기관장 후임인선작업 착수... 해당 장관 결정사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정부로부터 노무현 대통령당선인의 취임 전에 임기가 끝나는 정부 유관기관 임원 10명에 대한 후임인사 추천을 요청받고, 인선작업에 나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관광부가 13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1월과 2월에 임기가 끝나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과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 추천을 의뢰하는 등 취임 전 임기가 끝나는 유관기관 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정부가 인수위에 인사 추천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월 17일자 동아일보>

인수위 차원에서 인선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은 인수위 활동범위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 인수위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특히 현 정부에서 해야 할 인사를 인수위가 착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시 정부측에서 한국방송광고사장·문화예술진흥원장 등 몇 자리에 대해 (인선을)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인수위의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사회문화여성분과에서는 인수위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 장관이 판단할 문제지 인수위가 현정부의 인사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이다. 그 뜻은 당선인도 마찬가지이다.

### 금융종합과세 천만원부터... 보고·검토사실 없어

대통령직인수위는 19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개인당 4천만원에서 1,000만~1,500만원으로 강화하고,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1월 20일자 국민일보>

국민일보 1월20일자(가판) 1면 톱기사인 '금융종합과세 1천만원부터'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인수위원회와 재경부 파견 공무원에게 직접 확인한 바, 인수위에 보고된 사실도 없고 인수위에서 검토한 사실도 없었다.

### 휴대폰국번 '010' 통일... 인수위 '사실무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휴대폰 국번을 '010'으로 통일하기로 한 정보통신부의 정책이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특히 "KT시장 출신인 이상철 정통부 장관이 특정업체를 봐 주기 위한 조치"라는 업계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1월 21일자 매일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1월 21일자 1면 기사인 "인수위가 휴대폰 국번을 '010'으로 통일하기로 정통부가 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 어떤 방침이나 입장을 고려한 바 없으며, 따라서 정통부의 결정과 관련한 업계의 문제제기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

## 남북정상 연내 서울회담... 실무차원에서 검토 했을뿐

노무현 대통령당선인은 북한 핵문제를 다자간 북한체제 안전 보장 등을 통해 포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신뢰관계를 구축한 뒤 임기 5년 내에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는 '3단계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노 당선인은 특히 올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해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서울선언'을 채택, 전력감축과 상호훈련참관을 비롯한 군사적 신뢰구축방안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1월 22일자 한국일보>

한국일보 1월 22일자(가판) 1면 톱기사인 '남북정상 연내 서울회담' 제하의 보도는 실무자 차원에서 토의, 검토하고 있던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가지 의견 중의 하나로 보도내용 중의 상당 부분은 이미 논의과정에서 폐기된 것들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에서는 현재 국정과제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실무 T/F팀을 구성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제와 관련해서는 실무 T/F 차원에서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전혀 없으며, 최종안은 앞으로 많은 토의와 검토를 거쳐 확정될 것이다.

---

## DMZ 경제공동구역 추진... 인수위 검토한 적 없어

빠르면 올해 안에 개성-금강산 지역에 남북경협거점이 들어서 등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의 새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통일부에 따르면 1단계로 올해 내 경협거점으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특구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2단계(~2005년도)로 남포, 통천-원산에 2차 경협거

점, 3단계(2006년 이후)로 신의주·나진-선봉에 3차 경협 거점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단독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에는 '남북경제공동구역'을 건설해 공동 시장, 경협상담소 등 경협센터를 설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세계적인 환경친화경제단지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1월 22일자 세계일보>

세계일보 1월 22일자(가판) 1면 톱기사인 'DMZ 경제공동 구역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인용된 '단독 입수'했다는 보고서는 인수위의 자료가 아니다. 이 기사가 전하는 3단계 거점 개발 계획이란 것도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다. 현재 인수위의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T/F 팀은 2월 6일 각 유관 부처 발표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

## 상장사, 지방대생 채용 의무화... 의무화 아닌 '인센티브'

앞으로 민간 상장기업이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해마다 지방대 출신 졸업생 채용 비율을 의무적으로 늘리도록 하는 방안이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가령 종전에 지방대생 채용비율이 20%였다면, 올해는 22%, 내년엔 25% 하는 식으로 늘리고, 정부는 이런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장려한다는 것이다. 또 민간기업이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할 경우도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월 23일자 조선일보>

조선일보 1월 23일자 1면 톱기사로 '상장사 지방대생 채용 의무화'가 보도됐다. 그런데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장사 기업들이 지방대생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

## 국회 내 대북협약기구 신설... 전혀 사실 무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대북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회 내에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초당적 대북정책 협의기구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조치는 향후 대북정책 추진과정에 야당을 참여시킴으로써 북한 핵문제와 남북 경제교류 등 현안문제를 원만하게 풀고, 대북정책이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1월 23일자 한국일보>

남북 관계나 외교적으로 민감하고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 확인절차 없이 마치 인수위에서 확정돼서 당선인이 취임사를 통해 공식 발표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 운영관 외교통일안보분과 간사의 우려 표명이 있었다.

국가 안보나 이와 관련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앞으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수위의 공식의견이나 결정된 것처럼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나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

## 경인운하 백지화... 분과 의견일 뿐, 당정협의 거쳐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정부에 경인운하사업의 중단을 요청키로 했다.

인수위와 환경부에 따르면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와 경제Ⅱ분과는 정부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 등과의 면담과 자료검토를 거쳐 "경인운하의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며 사업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의 타당성이 문제가 돼도 일단 시작한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지 못했으나 이번을 계기로 이같은 관행이 고쳐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타당성 평가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은 논란이 되

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월 25일자 연합뉴스>

언론이 '경인운하 중단' 또는 '백지화' 라는 표현과 함께 "인수위가 중단을 요청했다"고 공사중단을 단정적으로 기정사실화해 보도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제 밝힌 경인운하 관련 발표는 의견발표였으며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발표됐다. 경인운하에 관한 인수위의 공식의견은 앞으로 간사단 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나올 것이다. 앞으로 경인운하 공사 지속 여부는 인수위의 최종 공식 의견이 나온 후 정부와 당의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다.

---

## 자문위 인선 확정... 현재 검토중 사안

16대 대선 이후 대학 교수 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 사회에서도 신주류가 형성되면서 '지식권력' 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인수위내 각 분과에 교수들이 주축이 된 총 644명의 자문위원 인선을 확정했다. <1월 29일자 문화일보>

문화일보에 분과별 자문위원 명단이 보도됐는데 자문위원단 구성에 있어서 현단계는 단순 추천단계임을 밝힌다. 아직 본인확인과 동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또한 분과위별로 범위의 확대나 축소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고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당사자 중 공개를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의 분류작업도 완료되지 않았다. 가능하다면 이번 주까지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다음 주 최종 확정명단의 발표를 검토할 예정이다.

## 소보원, 공정위 산하로 이관... 정부개편, 인수 위 결정과 무관

소비자보호원이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로 옮겨질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관계자는 29일 "소비자 정책 기능을 효율화하고 공정위의 경쟁촉진 정책과 연계성을 고려해 현재 재경부가 맡고 있는 소비자보호 정책의 주관 부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1월 29일자 한겨레>

인수위 경제분과는 정부조직 개편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으며, 결정을 내린 바도 없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원이 재경부 산하에서 이관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는 기사는 사실무근이다.

## 검찰간부 15명 요직배제... 사실무근, T/F 존 재 안해

노무현 대통령당선인의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팀은 5일 새정부 출범 직후 과감한 검찰 인사 개혁의 일환으로 현정권에서 인사 특혜를 받은 간부 15명은 요직에서 배제할 것을 노 당선인에게 건의했다.

노 당선인 핵심 측근과 민주당 관계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작성한 15명의 소위 살생부에는 검사장급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호남 출신이 상당수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스크포스팀 관계자는 "노 당선인의 검찰 개혁 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제1과제로 인사 개혁을 선정했다"면서 "살생부에 오른 15명은 검찰 조직 안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사람들이며, 구체적인 이름은 절대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2월 6일자 국민일보>

국민일보 2월 6일자(가판) 1면 톱으로 보도된 '검찰간부 15명 요직배제' 제하의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선인 밑에 검찰개혁 태스크포스팀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고, 팀이 있다하더라도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을 배제하는 이런 식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 盧, 日에 北 重油 제공 요청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지난 16일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을 만나 미국이 북한에 공급하다 중단한 중유를 일본이 대신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일본 도쿄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노 당선자가 가와구치 외상과의 면담에서 북한이 흑한기에 중유 공급이 끊겨 고통을 받고 있고 제2, 제3, 제4의 위험한 행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중유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 당선자가 한·미·일 합의에 의해 공급을 중단한 중유를 미국과 아무런 조율을 거치지 않고 일본측에 대신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가와구치 외상은 "북한 핵문제는 중유 공급 중단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이 아무런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유를 제공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당선자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1월 18일자 조선일보>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지난 16일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북한에 공급하다 중단한 중유를 일본이 대신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조선일보 18일자 보도(1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나 우리 외교부는 19일까지 일절 공식 반응을 하지 않았다. 우리 당국자들은 "당선자측 대변인이 밝혔다"면서 '노 코멘트(no comment)'라고만 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18일 "노 당선자는 북한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때문에 대북 중유공급이 중단됐다는 사실은 지적했지만, 중유 공급을 요청한 일은 없다. 이는 속기록을 한 자 한 자 확인한 뒤 말하는 것"이라면서 보도 내용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 대변인은 구체적인 회담 내용에 대해선 "고위급 외교에서 있었던 말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외교의 관례고 원칙"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한 정통한 소식통은 19일 "노 당선자가 '요청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측이 중유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월 20일자 조선일보>

### 盧, 日에 北 중유공급 요청

방한 日외상 "北에도 변화없다" 거절  
美와 사전조율 안거쳐... 美반응 주목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6일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과 만나 미국이 북한에 공급하다 중단한 중유를 일본이 대신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盧·日外상의 대표의 약속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6일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과 만나 미국이 북한에 공급하다 중단한 중유를 일본이 대신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 "盧, 日에 '北중유 제공했으면 좋겠다' 말해"

정부당국자 확인... 盧측 "그런말 안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6일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과 만나 미국이 북한에 공급하다 중단한 중유를 일본이 대신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조선일보 18일자 보도(1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나 우리 외교부는 19일까지 일절 공식 반응을 하지 않았다. 우리 당국자들은 "당선자측 대변인이 밝혔다"면서 '노 코멘트(no comment)'라고만 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18일 "노 당선자는 북한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때문에 대북 중유공급이 중단됐다는 사실은 지적했지만, 중유 공급을 요청한 일은 없다. 이는 속기록을 한 자 한 자 확인한 뒤 말하는 것"이라면서 보도 내용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 대변인은 구체적인 회담 내용에 대해선 "고위급 외교에서 있었던 말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외교의 관례고 원칙"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이낙연 당선인 대변인은 보도와 관련 “노 당선인이 북한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때문에 대북 중유공급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지적했지만 중유 공급을 요청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 대변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1월 20일자 2면에 ‘정부 당국자 확인’임을 전제, ‘노, 일에 북 중유 제공했으면 좋겠다 말해’ 제하로 노무현 당선인이 일본측에 중유공급 요청을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재차 보도했으며, 이에 인수위원회는 ‘노무현 당선인’ 명의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심판 청구를 실시했다.

- 청구이유

이 사건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왜곡·추측보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당선인은 지난 16일 일본 외무상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국이 북한에 공급하다 중단한 중유를 일본이 대신 공급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또 일본 정부가 북한에 중유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노무현 당선인은 일 외무상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때문에 대북 중유공급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북한이 상황을 계속적으로 악화시키는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했을 뿐이다. 특히 이런 바탕에서 노 당선인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제안하면서, 문제의 국제적 성격상 한국과 일본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으며 한·미·일 공조가 긴요하다는 사실을 일 외무상에게 재확인해 준 것이다.

접견이 끝나고 이낙연 대통령당선인 대변인은 1시간 동안 오간 양국관계, 북한핵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양국정상의 방문문제 등 주요 대화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자들에게 설명한 바 있는데도 조선일보측은 이낙연 대변인이 언급하지도 않은 내용을 18일자 1면 톱기사로 보도했고,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이 대변인은 물론 인수위 관계자 누구에게도 확인요청을 하지 않았다.

또한 조선일보는 이낙연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노 당선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강조했는데도 대변인의 사실관계 해명을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20일자에 또 보도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당선인측에 확인 요청이 없었는 바, 이는 특정한 의도를 가진 보도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대북 중유지원 문제는 94년 미-북한간 제네바 합의사항임과 동시에 국제·경제적으로 미치는 정치적 영향이 지대한 사안이다. 특히 미국이 대북 제재 차원에서 결정한 중유지원 중단조치는 단순히 북·미간의 문제를 떠나 한·미·일간의 중요한 외교문제이며,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동된 문제라 함은 누구나 공감할 터인데 만약 보도대로 노 당선인이 일본에 대북 중유지원 요청을 했다면 한국이 미국을 배제하고 일본을 파트너로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어 한·미간의 북핵 공조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하고도 미묘한 사안이 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간의 외교적 갈등마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여서 그만큼 국익과 직결된 사안인데도 조선일보는 무슨 의도에서인지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연이어 일삼았다.

특히 노 당선인의 요청을 일본 외무상이 거절했다는 이 사건 보도는 한국 대통령당선인의 체면·위신과도

곧바로 직결되는 것으로 일국의 대통령당선인이 외국 각료에게 것처럼 중요한 문제를 가볍게 제안했다가 '거절' 당했다는 것은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라 할 것인데도 조선일보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훼손하는데 앞장섰다.

###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3년 1월 18일자에서 "盧, 日에 北 중유공급 요청", 1월 20일자에서 "盧, 日에 '北중유 공급했으면 좋겠다' 말해"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일본정부에 대해 북한에 중유공급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월 16일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을

접견했을 때 미국이 북한에 공급하다 중단한 중유를 일본이 대신 공급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노 당선자는 가와구치 외상과의 면담에서 "북한이 흑한기에 중유 공급이 끊겨 고통을 받고 있고 제2, 제3, 제4의 위험한 행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중유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북한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때문에 대북 중유공급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북한이 상황을 계속적으로 악화시키는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했으며, 이런 바탕에서 노 당선자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말하면서, 문제의 국제적 성격상 한국과 일본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으며 한·미·일 공조가 긴요하다는 사실을 일 외무상에게 재확인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와구치 외상이 "북한이 아무런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노 당선자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본지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 노 당선자는 당시 한일 양국관계, 북한 핵 문제, 아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양국정상의 방문문제 등에 관해 폭넓게 대화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측이 중유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으며, 일 외무상이 노 당선자에게 '곤란하다'고 답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정보도**

본지는 2003년 1월 18일자에서 "盧, 日에 중유 공급 요청", 1월 20일자에서 "盧, 日에 '北 중유 공급했으면 좋겠다' 말해"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일본 정부에 대해 북한에 중유공급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월 16일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상을 접견했을 때 미국이 북한에 공급하다 중단한 중유를 일본이 대신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당선자는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말하면서 한·미·일 공조가 긴요하다는 사실을 일 외무상에게 재확인해 준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위 보도를 정정한다.

### 타워팰리스 內査, '삼성 손보기' 인가

서울지검 특수1부는 13일 삼성물산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타워팰리스'의 건축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첩보에 대해 내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3개 단지로 된 타워팰리스 중 하나가 2000년 당초 설계와 달리 35층에서 69층으로 늘어나고 지난 98년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삼성측이 관할구청 등 관계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타워팰리스의 분양 과정에 일부 분양 물량이 삼성물산 직원 등의 명의로 빼돌려져 유력인사들에게 특혜분양됐다는

**삼성 '타워팰리스' 內査**

검찰, 인허가과정 금품로비 여부 조사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박영관·차주필)는 13일 삼성물산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의 건축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첩보에 대해 내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43면

검찰은 3개 단지로 된 타워팰리스 중 하나가 2000년 당초 설계와 달리 35층에서 69층으로 늘어나고 지난 98년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삼성측이 관할구청 등 관계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미 확보된 첩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내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단지는 한 개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에서 대동원리 인수위원회와 삼성과의 관계 때문에 내사가 착수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측은 이에 대해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금품로비도 없었으며 타워팰리스는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에 따라 인허가된 특혜분양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첩보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미 확보한 첩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내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혐의는 한 가지도 없다"고 밝혔다. <1월 14일자 조선일보>

검찰이 서울 도곡동 삼성 '타워팰리스'의 분양 및 인허가 과정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경련 관계자의 '사회주의자' 발언 등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재계의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새정부가 삼성을 재벌 개혁의 표적으로 삼는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터라, 재계에선 이번 내사가 '삼성 손보기'가 아닌가 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의구심은 여전하다. 우선 내사 착수 시점이 미묘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7일쯤 강남구청 건축과에 타워팰리스의 인·허가 자료를 요청했고 사흘 뒤인 10일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7일은 인수위의 재벌정책이 삼성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즈음이다.

재계 관계자는 "착공한 지 4년이 경과한 타워팰리스에 대해 뒤늦게 검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은 삼성, 더 나아가 재계에 대한 일종의 경고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1월 14일자 조선일보>



**반론보도 심판청구**

조선일보는 2003년 1월 14일자 1면 '삼성 타워팰리스 內査'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지검 특수1부는 삼성물산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의 건축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첩보에 대해 내사를 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3면 '타워팰리스 內査, 삼성 손보기인가' 제하의 기사에서 재계의 입을 빌려 마치 이번 검찰 수사가 새정부의 삼성 '손보기'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듯한 뉘앙스로 보도했다.

인수위는 이에 이번 수사가 새정부나 인수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심판 청구를 했다.

**- 청구이유**

인수위원회는 대통령령에 의거, 새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를 준비하는 곳으로 검찰 또는 기타 정부기관의 주요 업무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인수위는 작년 12월말 출범 이후 검찰 수사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거나 영향을 끼친 사실이 없고, 혐의한 사실조차도 전혀 없다.

그런데 타워팰리스 인허가 과정은 행정권의 일로 새정부는 출범도 하기 이전 상황에서 특정 사건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입장에 있지도 않으며, 노무현 당선인이나 인수위 관계자 그 누구도 검찰의 내사 사실을 몰랐으며 신문보도를 보고서야 그 내용을 알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인수위는 조선일보로부터 어떠한 확인요청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인수위는 전경련 김석중 상무의 '사회주의자' 발언에 대한 사실확인 차원에서 다소간의 공방은 있었으나,

삼성 등 특정재벌 또는 재계 전체와 어떤 갈등관계에 있지 않다. 인수위는 1월초에도 일부 언론이 새정부의 '삼성그룹 겨냥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계의 동요가 일자 지난 8일 당선인이 직접 "새정부는 특정재벌을 겨냥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계획이 없으며, 지배구조 개선이나 계열분리 등의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놓고 기업의 문화로서 자율적으로 감당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 기사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시중의 루머에 의존해 검찰의 삼성 타워팰리스 수사가 인수위나 노무현 당선인의 지시에 의하거나 혹은 상호 협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강한 인상을 심어 주고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허위의 보도로서 추측성 작문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일보측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해 단 한차례도 인수위에 대해 사실확인이나 의견을 물어오지도 않았고 인수위에 반론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조선일보가 이 사건 보도에서 마치 인수위가 검찰을 통해 '삼성 손보기'를 한다는 의혹이 있는 양 부풀리기를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반론보도문

조선일보는 2003년 1월 14일자에서 "삼성 타워팰리스 內査", "타워 팰리스 內査, 삼성 손보기인가"라는 제목으로 마치 새 정부가 삼성을 재벌개혁의 표적으로 삼는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터에, 검찰을 통해 삼성 타워팰리스를 내사하였고 이는 '삼성 손보기'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라고 약칭함)는 대통령령에 의거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국가 주요정책의 분석 및 수립,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 기초를 설정하고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를 준비하는 곳으로 검찰 또는 기타 정부기관의 주요 업무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인수위는 작년 12월말 출범 이후 검찰 수사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거나 영향을 끼친 사실이 없고, 혐의한 사실조차도 전혀 없다. 타워팰리스 인허가 과정은 현정부의 일로 새정부는 출범도 하기 이전 상황에서 특정 사건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입장에 있지도 않으며, 노무현 당선인이나 인수위 관계자 그 누구도 검찰의 내사 사실을 몰랐으며 신문보도를 보고서야 그 내용을 알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인수위는 조선일보로부터 어떤 확인요청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인수위는 전경련 김석중 상무의 '사회주의자' 발언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다소간의 공방은 있었으나, 삼성 등 특정재벌 또는 재계 전체와 어떤 갈등관계에 있지 않다. 인수위는 1월초에도 일부 언론이 새 정부의 '삼성그룹 겨냥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계에 동요가 일자 지난 8일 당선인이 직접 "차기정부는 특정재벌을 겨냥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계획이 없으며, 지배구조 개선이나 계열분리 등의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놓고 기업의 문화로서 자율적으로 감당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인수위는 14일 재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해 긴밀한 협조를 갖고 있으며, 삼성그룹 계열의 삼성경제연구소로부터 경영컨설팅(조직진단)을 받기로 하는 등 지극히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인수위 및 새 정부는 특정그룹과 유착할 필요도 없고 특정그룹을 겨냥할 이유도 없다.

### "삼성 타워팰리스 수사 인수위 무관"

#### 반론 보도문

조선일보는 2003년 1월 14일자 '삼성 타워팰리스 內査'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의 삼성 타워팰리스 내사가 '새 정부의 삼성 손보기인가'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령에 의거,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 기초를 설정하고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를 준비하는 곳으로 검찰 또는 기타 정부기관의 업무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인수위는 작년 12월 말 출범 이후 검찰 수사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거나 영향을 끼친 사실이 없고, 혐의한 사실조차도 전혀 없다. 타워팰리스 인허가 과정은 현 정부의 일로서, 새 정부 출범 전에 이루어진 특정 사건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입장에 있지 않다. 노무현 당선자나 인수위 관계자 그 누구도 검찰의 내사 사실을 몰랐으며, 취재 중에 인수위는 조선일보로부터 어떤 확인요청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인수위는 삼성 등 특정 기업 또는 재계 전체와 갈등관계에 있지 않으며,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반론보도 신청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 임재정

## 동북아 중심국 정책 충돌

오는 25일 출범하는 노무현정권의 핵심 국정과제인 '동북아 경제 중심국' 건설방안을 놓고 대통령직 인수위와 정부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6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정토론회가 사실상 무산, 향후 입장조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인수위와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주한 외교사절까지 초청한 가운데 새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전세계에 밝힐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측의 의견대립으로 정부안은 발표조차 하지 못한 채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와 건의사항만 듣는 것으로 축소됐다. 차기정부 주요정책에 대해 인수위와 정부측의 입장차이로 주요행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다.

당초 인수위와 정부는 재경·통일·외교·산업자원·건설교통·정보통신·해양수산·문화관광부 등 7개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초청해 이날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려 했지만 인수위와 정부의 의견대립으로 행사에 중앙부처 장관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행사에는 노 대통령당선자와 인수위 관계자,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등만 참석했으며 서울·인천시와 경기도의 보고를 들은 뒤 김대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의 발제와 참석자들의 토론 등으로 간략하게 끝났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국정토론회의 부제도 '수도권의 비전과 역할'로 정해져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건설이 아니라 동북아경제 중심국가건설의 소주제일 뿐인 수도권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로 수준이 격하됐다. (2월 6일자 문화일보)

### 정정보도 심판청구

문화일보는 2003년 2월 6일자 1면 '동북아 중심국 정책 충돌' 제하의 기사에서 "노무현 정권의 핵심 국정 과제인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방안'을 놓고 대통령직인수위와 정부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정토론회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석간인 문화일보가 당초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토론회를 지켜보지도 않은 채, 낮 12시 경 성급히 예단을 갖고 보도한 것이었다.

실제 이날 토론회는 내실있게 치르지는 인수위 간사단 회의결정에 따라 참가규모를 축소, 당초 계획했던 외교사절단과 중앙부처 장관을 제외하고 노무현 당선인, 서울·경기·인천 단체장과 주한 외국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끝났다.

인수위는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임채정 위원장 명의로 정정보도 심판 청구를 했다.

- 청구이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대구를 시작으로 지방의 주요 도시를 돌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방순회토론회를 개최했는데 2월 6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토론회도

## '동북아 중심국' 정책 충돌

인수위-정부, 경제특구·세계지원방안 대립

외교사절까지 초청한 토론회 무산

오는 25일 출범하는 노무현정권의 핵심 국정과제인 '동북아 경제 중심국' 건설방안을 놓고 대통령직 인수위와 정부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6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정토론회가 사실상 무산, 향후 입장조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인수위와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주한 외교사절까지 초청한 가운데 새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전세계에 밝힐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측의 의견대립으로 정부안은 발표조차 하지 못한 채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와 건의사항만 듣는 것으로 축소됐다. 차기정부 주요정책에 대해 인수위와 정부측의 입장차이로 주요행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다.

당초 인수위와 정부는 재경·통일·외교·산업자원·건설교통·정보통신·해양수산·문화관광부 등 7개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초청해 이날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려 했지만 인수위와 정부의 의견대립으로 행사에 중앙부처 장관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행사에는 노 대통령당선자와 인수위 관계자,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등만 참석했으며 서울·인천시와 경기도의 보고를 들은 뒤 김대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의 발제와 참석자들의 토론 등으로 간략하게 끝났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국정토론회의 부제도 '수도권의 비전과 역할'로 정해져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건설이 아니라 동북아경제 중심국가건설의 소주제일 뿐인 수도권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로 수준이 격하됐다. (2월 6일자 문화일보)

그 일환으로 계획되고 실행됐다.

다만, 2월 6일 개최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국정토론회 행사는 당초 실무준비팀(경제Ⅱ분과)이 보다 많은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중국·러시아·일본·EU·그리스·몽골의 주한 외교사절단과 재경부 등 7개 중앙부처의 장관,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가 함께 참여하기로 기획했으나, 2월 5일 오전 열린 인수위 간사단회의에서 행사가 지나치게 방만하게 기획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참가규모를 축소, 행사를 내실있게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외교사절단과 중앙부처 장관이 제외됐고 당선인과 재경부 등 중앙부처 차관보, 기획실장 등 실무진과 3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월 6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약 2시간동안 진행됐다.

인수위는 대변인실을 통해 행사 하루 전날인 2월 5일 오전에 미리 이러한 사실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문화일보는 2월 4일자에서 ‘인수위-재경부 정면 대립’ 제하의 기사를 내보낸 데 이어 이 사건 기사의 제목으로 ‘동북아 중심국 토론회 무산’으로 뽑은 다음 “양측의 의견대립으로 정부안은 발표조차 하지 못한 채” “차기정부 주요정책에 대해 인수위와 정부측의 입장차이로 주요행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다” “인수위와 정부의 의견대립으로 이날 행사에 중앙부처 장관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추측보도를 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천에서의 ‘동북아 경제 중심국 건설’ 토론회는 당초 실무진이 기획했던 것보다 참석규모만 다소 축소돼 대통령당선인과 재경부 등 중앙부처 차관보, 기획실장 등 실무진과 3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진행돼 행사의 내용과 형식에는 변화가 없었다.

또한 문화일보측은 “인수위-정부 정면충돌”라는 제목으로 인수위와 정부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인수위와 재경부는 문화일보 2월 4일자 ‘인수위-재경부 정면 대립’ 제하의 기사와 동아일보 2월 5일자 ‘인수위-재경부 충돌’ 제하의 기사와 관련, 2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정착과 금융국제화, 물류중심지 구축, IT 등 첨단산업 육성 등 주요 핵심사안들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데에도 이해를 같이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인수위는 국내·외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IT 등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이 바람직하다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는 재경부도 같은 입장에 있다.

그런데도 문화일보는 재경부와 인수위의 사실관계 해명을 무시하고 인수위와 정부간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허위·과장보도를 했다.

또한 이 사건 기사는 “새정부의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전세계에 밝힐 계획이었다”고 보도했으나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관련 국정토론회는 지방순회 국정토론회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어서 애초부터 ‘실현방안’을 밝히는 행사가 아니고 실현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 될 예정이었으므로 이 부분의 기사도 명백한 허위보도이다.

문화일보의 이 사건 기사는 인수위와 정부가 사사건건 의견대립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국민에게 잘못 알려지게 했으며, 또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미리 계획했던 행사마저 취소된 것인 양 국민의 오해를 낳게 해 출범을 앞둔 새정부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또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프로젝트는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참여가 핵심이라 할 것인데 이처럼 국제적으로 주목을 끄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사로서도 국익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게 철저한 확인절차 없이 추측과 허위, 과장보도를 해 인수위를 포함한 정부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3년 2월 6일자에서 '동북아 중심국' 토론회 무산이라는 제목으로 2월 6일 인천공항에서 열릴 예정인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국정토론회' 행사가 무산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국가 주요 정책의 분석 및 수립, 새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 기초를 설정하는 기관으로서 지난 1월 27일 대구를 시작으로 지방의 주요 도시를 돌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방순회토론회를 개최했는데, 2월 6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토론회도 그 일환으로 계획되고 집행되었고 무산된 것이 아님이 확인됐다.

이 행사는 당초 실무준비팀(경제Ⅱ분과)이 보다 많은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중국·러시아·일본·EU·그리스·몽골의 주한 외교사절단과 재경부 등 7개 중앙부처의 장관,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가 함께 참여하기로 기획했으나, 2월 5일 오전 열린 인수위 간사단회의에서 행사가 지나치게 방만하게 기획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참가규모를 축소, 행사를 내실 있게 치르기로 결정함에 따라 외교사절단과 중앙부처 장관을 제외하고 노무현 대통령당선인과 재경부 등 중앙부처 차관보, 기획실장 등 실무진 그리고 3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월 6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약 2시간동안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토론회는 지방순회 국정토론회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어서 애초부터 '실현방안'을 밝히는 행사가 아니고 실현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 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수위와 정부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거나 인수위와 정부(재경부)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인수위와 재경부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정착과 금융국제화, 물류중심지 구축, IT 등 첨단산업 육성 등 주요 핵심사안들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데에도 이해를 같이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 인수위는 국내외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IT 등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이 바람직하다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는 재경부도 같은 입장에 있음이 확인됐다.

**정정보도문**

오전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행사가 지나치게 방만하게 됐다 지적이 제기돼 참가규모를 축소, 행사를 내실있게 치르기로 결정함에 따라 외교사절단과 중앙부처 장관을 제외하고 노무현 대통령당선인과 재경부 등 중앙부처 차관보, 기획실장 등 실무진 그리고 3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중심국가 실현방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방순회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인수위와 정부가 동북아경제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여 토론회가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수위와 정부는 동북아경제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주요 핵심사안들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양측의 입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보는 지난 2월6일자 '인수위-정부 정면충돌' 기사에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방안을 놓고 대통령직 인수위와 정부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6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열릴 예정이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국정토론회가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개최한 2월6일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 토론회는 당초 실무 준비팀(경제2분과)이 보다 많은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주한외교사절단과 재경부 등 7개 중앙부처의 장관,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 경기, 인천)가 함께 참여하기로 기획했으나 2월5일